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현대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음 7월 28일) 제 18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청년들 기살려 지역활력 찾는다

취업·창업·문화·복지·거버넌스 등 5개 분야
105개 과제로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 의결

전북도는 지난 15일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올해 4월에 제정된 전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살맛나는 전북 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5개 분야 12개 추진전략, 105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종합적인 정책기반 조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분야는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이며, 12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취업 및 고용분야는 청년 고용안정성 확보와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귀농귀촌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할 청년농업인 일자리 확보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창업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도내 창업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을 제고 및 안정적 성장 지원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창업 진입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문화, 여가분야는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구축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청년문화 인력 양성으로 청년문화 예술 활동을 확산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취약계층의 생활보장과 청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 지원하고 청년 적합 지원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등 청년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분야는 청년문제 및 수요의 다양성으로 인한 청년 협의체를 활성화해 소통하면서 청년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청년지원사업 추진의 컨트론타워 역할 기능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과제를 발굴, 실국 및 관련단체와

토론을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정책포럼을 활용, 분야별 전문가 간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의 청년정책방향에 맞춰 청년고용지원, 영농창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업 국가 조성, 주거비용 지원, 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의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발굴했고, 고용안정성과 복지, 지역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청년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 환경과 수요 분석결과에 따라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사업을 마련해 단계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고용 분야에서 청년 사회활동가 양성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프로젝트 수행 및 일 경험을 제공해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타시도 귀촌청년들이 도내에서 정착하여 창업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정착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창업 분야에서는 전북형 농생명 청년 창업 캠퍼스 조성(스마트팜)을 조성, 운영하는 농생명청년창업 특구 조성사업과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통해 창업 풀 패키지를 지원하는 창업드림스퀘어 조성사업이 있다. 문화 여가 분야에서는 청년문화주간 확대와 청년예술인에게 기초생활자금을 지급하여 전문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자활기업 발굴, 육성으로 청년층의 탈빈곤을 확대하고 취업준비생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게 된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청년 소통 및 공간제공 등 청년사업을 총괄하게 될 청년센터의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청년정책과제의 소요되는 추정 사업비는 5년간 약 4,345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323억원(54%) 도비 1,183억원(27%) 시군비 475억원(11%), 기타 364억원(8%)이며, 사업 특징별로는 신규사업 38개 1,510억원(35%), 기 추진사업 67개 2,835억원(65%)으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난 15일 전주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부영그룹이 지난 14일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3.8% 인상 수용 불가"

전주시 "부당 임대료 하향 조정 권고한 뒤 이행 안하면 강력대응"

부영그룹의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부영그룹이 지난 14일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하향 조정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옛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불가치

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영의 부당한 인상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영은 그동안 임대료를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토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난 6월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 불태울 고문과 이기홍 사장은 지난 12일 전주시청을 방문,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2% 초반대로 줄이고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연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

요청했다. 전남 후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영 측은 "법적상한선(5%)과 물가상승률·주변시세 등의 인상 요인을 떠나서 전주시와 입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이전의 5%에서 3.8%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부영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양 국장은 "부영이 임대료 인상안에 대한 임차인과의 변경계약을 10월 진행하고 임대조건신고는 내년 1~2월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고수할 경우 조정 권고하고, 만일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선정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6개 기관을 세대융합 창업을 지원 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수원, 경기, 경남, 대전, 전북으로 호남권역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다. 전북은 앞으로 3년간 총 6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번공모에 주관기관으로 나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대학(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창업지원단 등 창업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발굴해 지원하는 전북형 G+ Start UP 협업프로젝트 발표회 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진성원은 도내 창업지원 기관들이 가지는 역할과 장점을 모아 패키지형태의 세대융합 창업팀을 지원한다. /김진성 기자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새벽시간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검은 지난 15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A(51, 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8월 30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를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역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

2017 임실N 치즈축제

즐거움과 함께하는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추석	5	6	7
	8	9	10	11	12	13	14

주요 프로그램

천만송이 국화전시, 전국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제2회 전국어린이치즈창작동요대회,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최현석셰프),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치즈 및 낙농체험, 국내·외 치즈전시관, 임실N치즈피자 등 다양한 치즈음식

주최 임실군 주관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www.imsifestival.com 063. 643. 3900

2017 축제 보조금지원